

2025학년도 2학기 학력진단평가 2학년 민법 [사례형] 답안

시험일시 : 2025. 09. 05.(금) 16:00 ~ 17:30

출 제 자 : 김덕중 교수

[제1문](30점) - 2024년 제2차 변모. 사례형 제1문의 6 - 문제2.

1. 문제의 제기

2. 丙의 전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능 여부

가. 상계의 요건

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동종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 ② 양 채권(=적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③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닐 것, ④ 이러한 상계적상상태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제492조).

나. 압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지급금지채권인 수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례의 태도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가) 2021. 4. 9.자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2021. 4. 9.자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2021. 12. 8.로서 수동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인 2021. 11. 8.보다 늦게 도래한다. 따라서 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나) 2021. 1. 9.자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2021. 1. 9.자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2021. 10. 8.로서 수동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인 2021. 11. 8.보다 먼저 도래한다. 따라서 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3.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과 전부채권자 丙에 대한 상계의 범위(6점)

가. 판례의 태도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하며, 어느 것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나. 사안의 경우

전부채권자 丙과 압류채무자 甲은 분할채권을 가지게 되며,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인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 乙로서는 전부채권자(丙) 혹은 압류채무자(甲)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결국 乙은 丙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4. 상계로 소멸되는 범위

- (1) 자동채권액은 2021. 1. 9.자 대여금채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자를 수령한 다음날인 2021. 6. 9.부터 상계적상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와 약정 지연손해금이
고, 수동채권액은 丙의 전부금(임차보증금반환)채권인 2억 원이다.
- (2) 乙의 상계 의사표시가 2022. 7. 12. 丙에게 도달하였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는 2021. 11. 8.이 상계적상일이다.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상계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 (3) 상계적상일 2021. 11. 8. 기준, 자동채권액은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1. 6. 9.부터 2021. 11. 8.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 500만 원(= 1억 원 × 0.01 × 5개월)으로 총 1억 500만 원이고, 수동채권액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다. 따라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등액의 범위(1억 500만 원)에서 소멸한다. 결국 법원은 ‘乙은 丙에게 상계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천 500만 원(= 2억 원 -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5. 사안의 해결

丙은 乙에 대한 청구는 9천 500만 원 범위에서 일부 인용된다.

[제2문](20점) - 2024년 제1차 변모. 제1문의 6 - 문제2.

1. 문제의 제기(2점)

2. 소유권자 B의 戊에 대한 Z건물 인도청구 가부

가. 戊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戊의 Z건물에 대한 유치권 성립

(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을 것, ②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가 아닐 것, ③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있을 것, ④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⑤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이다(민법 제320조).

(나) 사안에서 도급인 乙이 신축 Z건물에 대한 원시취득하였고, 수급인 戊는 견련관계 있는 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타인 소유인 물건에 대해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을 가진다.

(2) 戊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판례의 태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
는바,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
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
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경우

戊는 점유를 이미 취득하였으나, 피담보채권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소유권보
존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후인 2022. 4. 5.이므로, Z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22. 3. 30. 이후에 도래한 것이다. 결국 戊는 그 유
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戊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이다(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 (2) 사안의 경우 乙과 戊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Z건물
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戊는 공사대금채권으로 乙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
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사대금채권은 戊의 乙에 대한 상대권으로서 채권이므로 戊는
계약당사자 乙이 아닌 B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에 대하여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 B의 戊에 대한 X토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가.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토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례의 태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에서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관계로 건물 부지
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부에 관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점유
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안의 경우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물점유자인 유치권자가 아닌 건물소유자가 하고 있으므로, 건물
유치권자로서 건물점유자인 戊는 X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B의 戊
에 대한 X토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사안의 해결

B의 戊에 대한 Z건물 인도청구는 인용되나, B의 戊에 대한 X토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